

제418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9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5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1)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4)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7)
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0)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9)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0)
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5)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9)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3)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1)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6)
1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0)
1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6)
1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2)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2)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1)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63)
2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1)
2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2)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교육부 소관
 -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교육부 소관
27.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가. 교육부 소관
28.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고발의 건(추가)
29.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추가)
30.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교육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추가)

상정된 안건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1) 3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4) ... 3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7) ... 3
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0) 3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9) 3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0) 3
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5) 3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9) 4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3) 4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1) 4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6) 4
1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0) 4
1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6) 4
1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2) ... 4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2) ... 4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1) ... 4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63) ... 4
2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1)	4
2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2)	4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25.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14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14
가. 교육부 소관	
27.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14
가. 교육부 소관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정복 위원 서면동의)	31
28.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고발의 건	32
29.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32
30.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교육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32

(14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오시기 전이라도 저희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일단 들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안전 상정에 앞서 교육부에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14일에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응시자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르고 모든 시험 과정이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장관님과 교육부 관계자들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15시 30분에 이석할 예정이니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십시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1)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4)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7)
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0)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9)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0)
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5)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9)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3)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1)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6)
1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0)
1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6)
1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2)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2)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1)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63)
2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1)
2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2)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13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24항까지 2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법안소위 문정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문정복 법안심사소위원장 문정복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10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48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중 2건은 원안 의결, 3건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고, 1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5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28건의 법률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을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인순 의원과 김대식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실시하는 내용으로 해당 시책은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서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성국 의원,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 상황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둘째, 학교장이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 및 지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 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 생활 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며 둘째,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민원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지영 의원, 강득구 의원, 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고등학생 학생선수에 한하여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학생선수 전체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고 이 경우 학교의 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정복 의원, 진선미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부과요율을 인하하고 부과대상을 축소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경감하고 학교 증축 시에 비용 부담을 학교용지 확보 시와 동일하게 명확하게 규정하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보고를 통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도시형캠퍼스를 원활하게 설립·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설립 지역 및 기준, 유형,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보고받은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안전법(대안)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9월 25일 법안소위에 심의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위원회 대안에 대해 수정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법은 현장 체험학습 등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여 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교육부와 논의 끝에 법안 제10조의4제2항에서 교육부장관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의무를 교육감으로만 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당국과 국고 부담에 대한 이견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선 이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현장의 실익을 고려해서 안전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재정적인 의무 사항을 살려 두는 것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문정복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해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내용을 다시 수정 제안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다만 제가 제안드린 내용으로 법을 수정해서 처리하더라도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통일되고 강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안전요원 배치와 지원 의무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서 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모든 학교의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학습 안전 조치가 강화될 수 있게 교육부가 매뉴얼, 표준조례안을 만들고 챙기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믿기로 하고 제안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학생 생명과 안전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재부의 입장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기재부의 반대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받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정된 대안으로 현장에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재정 당국을 설득하고 보완 입법이나 추가 모든 수단과 조치를 해서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국립학교는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수정하여 교육부를 삭제하였을 경우 시도 조례만으로도 이 대안의 현장 적용이 가능한지 이야기를 했을 때 현재 시도 조례를 통해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교육부가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제안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처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가 열릴 수 있도록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오늘 상정된 법안 17항부터 24항의 의결에 동참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다 아시는 대로 지난 29일 민주당만이 참여한 법안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비민주적으로 처리된 안건입니다. 특히 유감을 표시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저와 국민의힘 위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직회부를 거부하셨습니다. 아예 여당의 대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발의를 했었습니다만 거부당했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0월 24일 국정감사 하는 중에 민주당에서 직회부 2건이 있다고 저희에게 먼저 요청했습니다. 1건은 본 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조국 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안이 있다고 하였고, 두 번째는 학교용지법 개정안에는 민주당의 김준혁 의원안을 올리겠다고 저희한테 통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24일 날 저희가 법안을 발의하자 저희 교부금법 법안도 직회부하지 않고 다른 법안도 직회부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깬 것입니다. 저희 법안이 없을 때는 직회부를 해서 병합 심사를 하겠다고 하시더니 저희가 법안을 발의하자마자 입장을 바꾸셔서 직회부를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저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0월 28일에 민생을 위한 공통약속 추진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던 정신의 위반입니다. 중요한 정책은 여야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자라는 게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이 이 중요한 법안의 대안을 발의했는데도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 하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이미 무상입니다. 본 법안이 아니라 초등 교육법에 고등학교 교육은 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무상이냐 유상이냐가 아닙니다. 이미 무상인 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더 무상으로 합니까? 이미 공짜인 무상교육을 더 이상 어떻게 공짜로 합니까? 본 문제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자꾸 다른 쪽으로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그리고 상임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안건을 줄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의 이 안전조정위원회 요구서는 국회법 제57조2의 1항에 의해서 6명이 동의하면 안전조정위원회를 즉시 구성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6명의 서명을 받아서 위원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금 아까 조정훈 간사님이 직회부 거부를 했다는 위원장은 저를 가리키는 건가요?

○**문정복 위원** 저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저는 사실 직회부 거부를 한 적이 없어서 말씀드렸고.

일단은 안전조정위원회 구성 문제도 여야 간사님들께서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세요. 해 주시고요 양당의 입장이 있는 건 분명한데 이럴 때 간사라는 직책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서로가 합의를 도출해 내는 일이니까요 두 분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간사님.

○문정복 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법률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풍선과 같은 겁니다. 실제로 조정훈 간사께서 내신 법률안은 굉장히 급조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가와 그다음에 지방 시·도교육청과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분할하기로 했던 이 세 주체의 예산에 대한 분담이 합리적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청으로 일괄 부과하려고 하는 재정 당국의 행태는 지방교육청이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늘봄학교, 유보통합, 기타 AIDT(디지털교과서) 등 굉장히 많은 수요를 동반하는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넘기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정까지도 시·도교육청에 넘기려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악랄한 수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조정훈 안을 받을 수도 없을뿐더러, 저희가 김준혁 안을 받고 강경숙 의원은 받고 조정훈 의원은 안 받기로 했더라는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강경숙 안이나 김준혁 안을 저희가 받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다만 조정훈 의원이나 강경숙 의원안이나 김준혁 의원안을 받지 않은 이유는 숙려기간이 되지 않았고 내용이 기본 취지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훈 간사께서 충분히 당의 입장을 설명을 하시지만,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하시지만 저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는 이 제도를 지켜 내기 위해서는 말뿐인 것보다 실제적인 대안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고 그에 대한 법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조정훈 위원 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제 말씀을 좀 들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양당의 입장 차이가 있고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포함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간사님께서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협력을 해 왔던 문정복 간사님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아서.

위원님, 어떻게 상대 의원, 다른 당 의원의 법안을 졸속이라고 그리고 급조되기 짝이 없다고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법안을 읽어 보시기는 하셨네요.

○문정복 위원 봤잖아요.

○조정훈 위원 그런데 그러면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문정복 위원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 권한이 위원장님에게 있습니까?

○문정복 위원 저는 위원장이니까요.

○조정훈 위원 아니,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위원장 김영호 이게 지금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상대방 의원의 법안을 급조되기 짝이 없다라고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아무리 나쁜 법안도 상정해서 논의하면 될 일이지 이걸 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급조되기 짝이 없고 역량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 법안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그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허용되는 제도를 요구한 겁니다. 아시는 대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 간에 동의가 된다면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은 것도 직회부했고, 민주당에서 22대 국회에 직회부한 법률이 한두 개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이견이 있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면 논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의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있다라는 걸 논의하면 되는데 어떻게 논의 자체를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전조정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떤 안이 더 지속가능한지 우리 국가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논의하자는 건데 민주당은 논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 안의 이슈는 무상교육이나 아니냐가 아닙니다. 공짜는 공짜고, 이미 무상인 교육입니다.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될까의 문제인데 이걸 자꾸 다른 데로 치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정말로 중립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시려면 이런 발언들, 상대방 의원의 법안이 급조되기 짝이 없다, 따라서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는 발언은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조정훈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아마 속기록에 잘 기록이 됐으니까요 그 정도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 이게 제가 봐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의 정책적인 기조는 지금 교육부가 여러 가지 재정을 시·도교육청에 너무 이렇게 전담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토론 속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는 저도 회의적인 판단이 들고요.

○조정훈 위원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십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니, 이게 국정 기조……

○조정훈 위원 토론 자체를 안 하시잖습니까, 지금.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이 국정 기조와 또 당의……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기조는 분명히 정해져 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기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에서 합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것은 좁힐 수 없는 의제예요, 사실.

○조정훈 위원 좁혀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안을 놓고 토론하지 않고 어떻게 짐작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영호 당론 가까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저보다 저희 당의 내부 사정을 더 잘 아세요? 저희가 정책위의장

하고 상의하고 대통령실과 교육부와 다 상의한 내용을 다 아세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건 아니지만……

○문정복 위원 그냥 반대한다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될 걸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조정훈 위원 아니, 왜 논의 자체를 안 하십니까?

○위원장 김영호 AI 디지털교과서 문제든 여러 가지 수반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으로 정부 측에서도 지금 전환하고 있잖아요.

○조정훈 위원 아니, 내년에 3조, 4조, 5조 원이 더 교부금으로 나갑니다. 그중에 9000억을 더 부담하라는 겁니다.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면 돈이 남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내용을 하자고 법안소위를 만든 거고……

○위원장 김영호 돈이 남는다는 얘기도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할 수는 없고요.

○서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말씀 주세요,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이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양당 간사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조정훈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정복 간사님께서 지난 법안소위 말고 그 전까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법안소위를 운영하셔서……

○문정복 위원 지금도 합리적이에요.

○서지영 위원 저희가 참 기대가 컸었는데. 아까 조정훈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법안을 급조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입장을 악랄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고 또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위원장님께서 지금 윤 정부의 국정 기조에 포함되고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에 포함돼서……

○위원장 김영호 가깝다라는 말씀이었습시다.

○서지영 위원 가까워서 입장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감스럽습시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를 어떻게 파악하시고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를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안이 일몰 법안인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되었고 그때도 민주당은 다수당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였습니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이러하다 하면서 마치 우리 당이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겠다는 것처럼……

○위원장 김영호 그런 취지 아니었는데요.

○서지영 위원 안 하겠다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위원장 김영호 그 말씀에는 제가 유감입니다.

○서지영 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 일몰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되었고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교육위원회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운영하셔서 이 법안은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제대로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영호 그만하시고요.

저는 분명히 재정 조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지 무상교육의 찬반에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무상교육을 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다만 제가 국정 운영의 기초라는 것은 재정이 수반되는 것을 국고보다는 시·도교육청에다가 그 부담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 때 그 말씀들을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좀 드리고요. 다만……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께서 제 말을 끊으셨으니까……

○위원장 김영호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취지는 국민의힘은 무상교육을 반대하고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거기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조달 방법에 대한 차이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할게요.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제가 운영위도 하고 있는데 정성국 위원님도 운영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안들이 자꾸 문재인 정부 대 윤석열 정부를 비교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재인 정부 지금이 몇 년 차입니까? 8년 차입니까, 몇 년 차입니까?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일몰법은 대체로 보통 5년을 짓든 10년을 짓든 이런 식으로 법을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 이것을 다시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몇 년을 연장할 것인가, 그 해당 연도에 있는 의원들이 여야 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일몰법 만들었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도 있고 박근혜정부도 있고 이명박 정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책임으로만 돌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몰법 연장하는 법안 혹은 그냥 폐기하는 법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건데 왜 이제 와서 뭐라고 하나 하는 것은 너무 도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결국 고교 무상교육을 국비로 가느냐 교부금으로 가느냐 문제인데 사실은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교육부가 냈던 예산안들을 꼭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새롭게 쓰여야 될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정훈 간사님도 그러셨어요, 교부금이 많이 늘어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3.4조 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24년도 23년도 계속 세수결손이었다는 것도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면 25년도에도 세수결손이 또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AIDT 그다음에 유보통합, 늘봄에 관련해서 제가 그냥 발견한 예산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 야당 입장 혹은 저의 입장에서 AIDT 100% 다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조정훈 위원 그런 것을 일단 논의하자는 거지요.

○고민정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현재로서는 사실은 AIDT도 아니고 고교 무상교육이잖아요, 이것은 여야가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게끔 확보 가능한 방법이 결국은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5년 10년으로 우리가 연장하거나 일몰법을 폐지하는 것을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3년밖에는 연장시키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야당 위원들은 또 있거든요. 그러나 여당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나마도 줄이고 줄여서 3년으로 통과시켰던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7항부터 20항까지 4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조정훈 위원 외 다섯 분이 안전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안전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위원의 수를 같게 하여 6인으로 구성합니다.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분 간사님이 언제까지 이것 조정위원 후보자를 위원장에게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문정복 위원 오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오늘 내로 하실 수 있겠어요?

○조정훈 위원 이 상임위 끝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이에 따라 두 분 간사님은 11월 5일까지 조정위원 후보자를 위원장에게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질의할 위원님들이 없으시지요?

이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24항까지 개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부터 7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지금 논의할 사항을 백승아 위원께서 제안한 것을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8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부터 11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12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3항부터 1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16항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7항부터는 안전조정위원회에 갔으니 이것은 패스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1항부터 2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24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2에 따라 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이주호 장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20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학교용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국가 재정 상황에 따른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합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주호 장관님 감사합니다.

교육부장관과 공무원들은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들이 조기에 시행되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교육부 소관

27.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가. 교육부 소관

(14시45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25항부터 27항까지 2025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등에 관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025년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교육부는 청년의 미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및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의대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수, 교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대학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벌대학 관련 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국가 책임 교육,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 교육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조 879억 원이 증액된 104조 8767억 원입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보육사무 중앙단위의 관리체계의 일원화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사업 5.4조가 이관되었고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3.4조 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부 소관 2개의 기금은 사학진흥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올해 대비 6045억 원 증가한 6.7조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향후 교육부의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정부안으로 제출된 교육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배용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교육정책 및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미래교육토론회·워크숍 사업을 확대하였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이후 시행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및 이행 관리를 위한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25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와 기금 없이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본예산보다 3억 6300만 원 증액된 10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보다 1억 4400만 원 증액된 49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업무 수행을 위한 전체회의 등 법정회의 운영을 위해 1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연구센터 운영과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 25억 1700만 원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을 위해 4억 7700만 원 국민 의견 수렴과 현장 소통 활성화를 위해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2억 9200만 원 증액된 3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7300만 원 감액된 2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노트북의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은 간사 협의에 따라, 예결소위 여덟 분이시거든요. 예결소위 여덟 분에 속하지 않은 위원들에 한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7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정 위원님이 조금 먼저 손을 드셨고요. 김준혁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하시지요.

○강경숙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참고로 3시 반에 이주호 장관께서 이석을 하셔야 되는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 그래서……

○위원장 김영호 의사진행발언이셨어요?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3년 경력의 과밀 특수학급을 담당하던 30세 초임 특수교사가 돌아가셨거든요. 안타깝게 이 선생님은 결혼을 앞둔 상태였는데요. 이번 사망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특수교육 현장의 총체적 문제가 보입니다. 해당 학교 정원이 6명인데 특수 선생님은 중증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서 12명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29시간의 수업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교육부장관님께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또 추모는 하셨는지 여쭙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밀학급 그리고 과도한 행정업무, 무책임한 관리 체제, 절대적인 지원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법정 교사 수와 또 교사당 학생 수 기준을 위반해도 징계나 처벌이 없는 실정입니다. 서이초 사태처럼 특수교사 한 분이 무거운 책임과 책무를 또 격무를 혼자 짊어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런 특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선생님들을 지키고 특수교육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긴급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원하기는 교육위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교육위원님들과 교육부가 함께 짧게라도 묵념으로 추모드릴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저도 100% 동의합니다.

○진선미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저희가 김대남 선임행정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전히, 그때 교육부에서도 챙겨 보겠다고 하셨는데요. 아직 전혀 자료가 오지 않고 심지어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생활 침해의 목적인다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학점 관리의 투명성인 거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대는 4분의 1 이상 출석을 안 하면 학점 자체를 줄 수 없도록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거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경기대에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결과를 알려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어쨌든 현장조사 해서 경기대에 요청해서 그 부분들, 학사 관리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지난 국정감사 때 진선미 위원님이 몇 차례 언급을 하셨는데 교육부장관님께서서는 관련된 요청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그 대학에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세 차례나 시행을 했습니다만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대학에 요구하고 또 협조해서 자료제출받도록 하겠고요.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조가 안 될 경우에는 의원실과 협의해서 대책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께서서는 감사까지 실시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시니까요.

○진선미 위원 그렇지요. 그게 학사 관리의 투명성이니까 당연히 감독권한을 발휘해서, 제보자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대 입장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현장조사 결과를 얘기해 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변호인 의견서까지 내서.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있으면 당사자가 간단하게 해명하면 이런 의혹을 우리가 다 말소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장관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진선미 위원님 실과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강경숙 위원님이 아까 제안해 주셨던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 선생님의 비통한 죽음에 대해서는 정말 전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 교육위원님들께서도 큰 슬픔을 함께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잠시 앉아서……

서서 할까요? 일어서서서……

○조정훈 위원 상임위에서 묵념을 합니까?

○위원장 김영호 할 수 있지요. 이것은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잠시 묵념해서 돌아가신 교사 선생님들의 슬픔을 위로해 드리고 또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뜻에서 다들 일어서서 잠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앉아 주십시오.

(일동 착석)

특수교사 선생님 문제는 우리 국감 때도 현장 방문을 가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특수교사 대 장애인의 비율을 줄이는 법안을 한번 함께 추진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법안이 나오게 되면, 장관님께서도 특수교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4 대 1이라는 현행법도 지금 지켜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법을 좀 수용하셔서 장애인과 특수교사의 비율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이번에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 특수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교육부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또 특수교육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위원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원장 김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서 장애인 문제, 특히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 선생님 같은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입법을 정말 책임감을 갖고 잘 추진하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은 발언이셨나요 아니면 의사진행발언……

○김대식 위원 질의……

○위원장 김영호 질의했군요.

그러면 고민정 위원님 그다음에 김준혁 위원님 다음으로, 죄송하지만 여당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하시고 정을호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고민정 위원 장관님, 지금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국비든 아니면 교부금이든 9400억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고민정 위원 제 걱정은 이것을 교부금으로 쓰게 되면, AIDT를 비롯해서 교육부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예산들도 다 교부금으로 쓰겠다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감당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AIDT 보니까 디바이스 구매 및 네트워크 확충으로 3403억 원이 쓰인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구독료까지 합쳐지게 되면, 구독료는 아직 협상 안 됐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구독료는 아시다시피 협상 결과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입조처에서 최소 금액하고 최대 금액으로 했으니까 그 어디쯤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금액을 보니까 내년 구독료 예산이 최소가 1766억에서 최대는 5693억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네트워크 확충 비용하고 합하게 되면 5000억에서 9000억 사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고교 무상교육 9400억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의 덩어리거든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보니까 당장 내년부터 만 5세는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히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쓰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그게 국고로 할지 지방비로 할지에 대해서는 국회가 좀 더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 국회가 논의해야 된다고요? 이것 법 사항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민정 위원** 정부 예산안에 포함 안 되어 있으면 이것도 교부금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2861억 원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 안 되어 있지만 또 국회 논의에서 국고로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정 위원** 봐 봐요. AIDT 대략 한 9000억 그다음에 만 5세 무상교육 2800억, 또 있어요. 늘봄학교 예산이 올해 1조 1657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초 1·2학년으로 학년이 확대되기 때문에 2배가 늘어나는지 1.5배가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것보다는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어디서 쓰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늘봄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의 지방비로 쓰게……

○**고민정 위원** 이것도 교부금이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고민정 위원** 그러면 봐 봐요. 이것 한 2조 정도, 그러니까 올해가 1조 1600억이었으니까 2개 학년으로 늘어나면 대략 한 2조 정도 된다 치고, 이것 한 2조 됩니다. 다 교부금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감 하는 내내 계속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세수결손이 23년에 10.4조였고 24년에는 4.3조였고,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세수결손에 대해서는 지방교육교부금 경우에는 지금지금이 사실 한 10조 이상이 적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또 충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대책을……

○**고민정 위원** 장관님, 저도 그 기금에서 쓴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그걸로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장관님의 임기는 어찌 됐든 거의 윤석열 정권 내이시겠지요. 한 이삼년, 맥시мум으로 다 한다 치더라도. 그런데요 국가는 계속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정화기금에 대해 저희가 각 교육청별로 팬찮은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상태로 지속되면 26년이면 기금이 다 고갈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기금에 대한 예측은 가능합니다만 학생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또 수요에 대한 예측도 동시에 해야 되는 거고요.

○**고민정 위원** 애들 다 졸업시켰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한창 초등학생 중학생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그 얘기 들으면 억장이 무너져요. 저희 때보다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애들 교육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해 왔는데 지금 가 보면요 제가 다니던 때하고 하나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전자칠판 하나 있는 것 정도. 그런데 매번 장관님은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팬찮다고만 하시니, 그러면 내나 똑같은 데서 또 애들 교육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부모로서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수결손 문제가 그냥 단순히 기금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26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건 각 교육청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무슨 콧감 빼먹듯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넉넉지를 았다 보니까, 혹은 고교 무상교육을 9400억을 써야 되다 보니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 사업비 가운데 20억 이상 감소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가 하고 제가 좀 받아 봤거든요. 봤더니요 저소득층에게 수학

여행이나 체험학습 경비 지원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복지와 관련된 예산 사업들 이게 다 삭감됐더라고요.

그리고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데 기초학력 관련 예산 사업은 50%가 다 삭감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문화예술 교육활동, 각종 체육활동, 우리 다 그 얘기 하잖아요.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문화예술적 소양들도 많이 공부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 예산은 거의 한 90%가 삭감이 되어 있고요.

고교학점제도 하실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고민정 위원 본격 시작돼서 한다고 또 발표도, 어제 선생님들하고 차담회에서도 말씀 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고민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고교학점제를 위한 예산은 100억이 넘게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소득층들에 대한 혹은 문화예술 활동들, 독서교육 그리고 고교학점제 이 예산 다 삭감해 가지고 고교 무상교육 9400억을 그걸로 충당한다는 건가 아니면 그걸 AIDT로 충당한다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가 허황된 얘기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께서 교육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예산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희도 교육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고요. 그렇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재정 당국과 항상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도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에서 지방교부금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를 했지만 다행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일몰을 2년 더 연장하는 걸로 오늘 막 국무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됐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고민정 위원 장관님, 빨리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더 있어요. AIDT 관련해서 예비교원 AI 디지털교육 지원사업 예산이 18억 7700만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이거 완전 엉망입니다. 이거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DT 구독료 지원이 그 내용입니다, 이 예산의. 그리고 산출 근거를 봤더니 예비교원 AIDT 구독료 지원 곱하기 1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가 봤더니 학교, 그러니까 교대라든지 사범대라든지 이런 데가 74개교인데 한 학교당 24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책정을 하셨어요.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 차관이 잠깐……

○고민정 위원 차관님, 맞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구독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교원대의 학생 수하고 그냥 일반, 예를 들어 창원대학교의 학생 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고민정 위원** 그러면 구독료기 때문에 학생 수 곱하기 구독료 해서 예산이 나와야지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냥 학교당 2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교원대는 학생 1명당 2만 1000원이고요 창원대학교는 학생 1명당 160만 원의 구독료를 지원받는 게 돼요. 그게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것은 내역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총액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구체적으로 배분할 때는 지금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의 숫자 그리고 여건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배분 기준을 저희가 따로 마련……

○**고민정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차등 지원을 할 거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 숫자는 신입생들 기준으로 뽑으셨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1학년 신입생이 아니라 이제 곧 선생님이 될 마지막 졸업학기에 있는 사람들 아니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것은 정확히……

○**고민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AIDT 활용하려면 관련 과목도 개설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AIDT, 디지털교육 역량입니다. 디지털교육 역량을 위한 예비교사들의 사전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편성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용한 범위 내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지금 AIDT와 관련돼 있는 적절한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배분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다른 예비교원 양성 기관 역량강화 사업에 연계시켜 가지고 그쪽에서는 교육과정도 같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기존의 학교뿐만 아니라 예비교원의 양성 단계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독료 그리고 학교별로 지원 이렇게 예산을 산출하는 건 엉망인 것 같습니다. 다시 짜셔야 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렇게 하고요 이거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배분하는 그런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고민정 위원** 아니, 이게 합리적이어야 저희가 통과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건 상세하게 예산심의하실 때 저희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 조정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지적 사항 잘 반영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장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제가 전공한 정조 이야기 한 말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조가 무예도보통지라고 하는 책을 냈을 때 서문에 실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조 시대가 실학의 시대인 건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준혁 위원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새가 좌우의 양 날개로 날아가고 수레가 양 바퀴로 움직이듯이 문과 무는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시대로 적용을 해 보면 바로 인문학과 이학·공학, 지금 우리가 흔히 이공계라고 하는 이 2개의 양 날개가 함께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보여 주는 정책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런데 이 예산서를 제가 좀 보니까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거나 수레가 양 바퀴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쓸 데는 많아지고, 예산은 좀 늘었다고 하나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통합 때문에 온 예산이라 실제 늘어났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 관련된 예산이 좀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납니다.

뒤에 국사편찬위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한국사 연구와 관련된 내용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인문학 관련된 내용, 여기 보면 예산서 안에 인문학 진흥 예산 281억 원인데 사실은 94억 감소됐습니다. 한국학 진흥과 관련해서도 20억 감소됐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관련된 예산도 15억이나 줄었고요. 고전 번역은 예산이 7억 늘었다고 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 이게 늘었느냐? 인쇄비부터 시작해서 제본비 이런 것 때문에 발간비가 조금 는 건데 책 규모 내용들, 고전 번역하는 내용 전년 2024년과 동일합니다.

기초학문 확산 지원과 관련해서 123억 늘었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 내용으로 봤을 때 대부분이 다 실제적으로 준 겁니다. 장관님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인문도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내용은, 예산은 살짝 늘었는데 실제 지원하는 도시는 줄었습니다. 이 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 증진 55억이나 감소됐습니다. 이거 국사편찬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감소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과 관련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예전에 지원했던 해외연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김준혁 위원 번역과 관련된 예산 증액들 혹은 지원사업들이 컸는데 이 안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내용들 이게 ODA 사업 예산은 늘어났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학을 알리는 일들은 상당히 준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예산안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역사

전쟁 시대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K-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케이팝 이야기 또 K-음식 이야기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K-역사, 우리의 중요한 역사와 관련된 내용 독도와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알려져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는 예산을 줄이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바가 큼니다. 제가 예산 말씀드릴 때는 결국……

○**김준혁 위원** 세밀하게 다 못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닙니다. 저희 욕심으로 보면 정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더 강조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런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서 국회에서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김준혁 위원** 저는 과거 연구직공무원이었지만 9년 동안 하면서 지자체 예산 전체를 다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보기만 하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딱 보는 순간 여기에는 바로 인문학을 갖다가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국가교육위원장님이신데 인문학 늘리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급식비 관련된 이야기. 지금 유치원 과정은 누리과정 예산과 별도, 급식비 지원 예산 별도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급식비 관련해서는 보육비 지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차별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게 어떤 거예요? 세계 최고 유보통합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장관님 한두 번 말씀하신 거 아니신데 그런데 급식비 관련해서 이렇게 차별적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교육·보육 간의 차별적인 부분들, 차이 나는 부분들을 계속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 유보통합에서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예산 조정이 급작스럽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우리 여야가 계속 대치됐던 게 고등학생들 밥 먹는 거 가지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세상에 밥 먹는 것이 차별되면 그것만큼 치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서러운 게 어디 있어요?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서럽지 않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누구는 유치원에서 제대로 급식비 지원받고 더 어린애들은 지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아까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관심 갖고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장관님을 아주 눈여겨보실 겁니다. 차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조실장님도 마찬가지.

세 번째……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표준보육비용,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 이걸 함께 조사해 가지고 비용구조를 개편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차별되거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금 과감하게 격차를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AI 디지털과 관련해서 자료화면 잠깐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원래 디지털교육 혁신과 관련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운용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보게 되면 이 안을 통해서 보통교부금으로다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특별교부금으로 하게 돼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과서는 워낙은 교부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서, 특교가 특히 교사 연수를 위해서 쓰여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준혁 위원** 다 마찬가지로지 않습니까? 특교가 교사 연수로 해서 0.8% 쓰게 특별하게 되어 있었던 건데 실제로다가 이 AI 도입과 관련해서 나머지 예산들을 지방교육청으로 내려보내서 보통교부금으로 쓰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회의 예산 검증이라든가 승인이라든가 감사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꼼수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국회에서 AIDT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 주셔서 가지고 실제로도 많이 반영도 되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국회와 함께 AIDT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준혁 위원**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면, AIDT 사업과 관련해서 국회가 예산을 갖다 제대로 감시할 수 있고 이 편성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걸 지방 시·도 교육청에 보통교부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를 통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국가, 특히나 우리 국회 교육위가 제대로 컨트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께서서는 사실 예결소위 위원님이셔서……

○**김대식 위원** 간단하게만.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하여튼 특별하게 제 직권으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영광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드리는지 아시지요?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드디어 교육부 예산이 100조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정사상 교육 예산이 100조를 넘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다음으로 교육부 예산이 100조를 넘어서 함께 이제 100조의 시대가 됐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을 한번 잘 운영해 봐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체계가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또 지역 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격차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대학이 전국에 130여 개가 있지 않습니까? 130여 개가 있는데 거기의 취업률이 70%가, 한 72.9% 그러니까 73% 정도가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정주율, 거기서 졸업해 가지고 거기 하는 정주율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일반대학에 비해서 한 16% 17% 정도가 높은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좀 증액이 필요해 보이는데 전문대학의 혁신 지원에 7383억 원, 2024년에 6472억 원, 2025년도에 5555억 원으로 이렇게 3년 연속 줄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RISE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학에 대한 지원의 거의 한 절반을 지자체로 이양을 해서 지자체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학과 전문대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으로 다 넘겨서 지자체가 좀 지자체의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전문대학 혁신 지원 이 사업 자체는 감소를 시킨 겁니다. 그렇지만 지원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30여 개 전문대학에서는 이게 불평불만이 있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면 지자체로 넘겨도 4년제 대학 위주로 이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대학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 지역별로 아우성인데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서 신경을 좀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또 국회에서도 그 부분을 좀 많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ISE 체제라는 것이 지자체가 고등교육을 절반 이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인데 또 많은 분들이 지방으로 넘겼을 경우에 오히려, 소위 중점대학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돼서 전문대학들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대학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지금 지자체랑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감시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산이 통과되고 확정이 되면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쪽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배려를 해 주는 것이 균형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지자체가 RISE 체제에서 역할을 할 때 전문대학이 좀 더 균형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고등교육에 있어서 교육부에 옥동자가 3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4년제 대학이 있고 전문대학이 있고 지금 사이버대학입니다. 사이버대학이 전국에 20개 정도 있고 졸업생 동문이라면 한 45만 명 50만 명에 육박을 하는데 내년 예산이 고작 32억이예요. 그러면 1개 대학을, n분의 1로 나눈다고 해도 한 대학에 1억 6000만 원인데 이거는 좀 고등교육에서……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사이버대학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 셋째 자식도 좀 한번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이 정도로만 시간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말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교위 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이배용 위원장님께 질의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님,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체계(안)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맞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정을호 위원 보면 전문위원회에서 이슈페이퍼 4종, 특별위원회 보고서, 정책연구 결과 그다음에 의견수렴 결과를 해서 종합연구보고서 및 초안을 만들어서 전문위원회와 검토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정을호 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가는 건 뭐냐면 셀프 연구, 연구자가 자신이 제안했던 걸 연구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했던 부분을 다시 심사해서 그걸 채택하고 이런 부분이 확인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초안에 반영된 지난번의 1억 4000만 원짜리 중장기국가발전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정을호 위원 그 부분이 김영수 연구책임자가 계약돼 있던데 이 부분이 제한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되었더라고요. 김영수 연구책임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시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공모를 했는데 1개만 응모를 해 가지고……

○정을호 위원 김영수 책임연구원이랑 잘 아시는 사이인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니요, 서강대 교수이신데요 아주 잘 알지는 않지만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대 총장 때부터 입학처장 하셔서 가지고……

○정을호 위원 박근혜정부 때 한국평가연구원장이셨고 원장님은……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제가 평가연구원 자문위원……

○정을호 위원 한국중앙연구원장에 계셨더라고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맞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런데 또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이 연구에 참여한 6명 연구원들이, 현재 지금 전문위원들 6명이 그대로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셨나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니, 전문위원도 있고 특별위원도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런데 수립체계(안)을 보시면, 종합연구보고서 기본 뼈대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정을호 위원 그런데 정책연구 참여자들이 각각 검토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고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정책연구의 하나의 과제는 책임연구자가……

○**정을호 위원** 보시는 바와 같이 김영수 책임연구원이 검토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자기가 연구했던 결과를 다시 검토해서 채택을 하는 그런 과정도 밟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임연구원이 나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자기 연구 결과를 선택하는 검토위원으로도 참여하고 계세요. 맞나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검토위원회에는 책임연구자로 들어오셨는데 그 전에 교육발전연구센터에서 다 수렴한 것을 하는 거지 자기 것을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렴이 된 것……

○**정을호 위원** 자기 것 할 때 제척이 됩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정을호 위원** 그러면 자기 것 할 때 제척이 돼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니, 그게 수렴이 되는……

○**정을호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한 거를 자기가 검토한다는 거잖아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니, 그거 자체는 아닙니다. 그게 다 수합이 된 것을 가지고 정책연구에서……

○**정을호 위원** 본인이 연구한 거를 본인이 나중에 결과를 채택한다는 것 아니에요? 연구자가 선택 여부를 자기가 선택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니, 발전연구센터에서 다 수렴을 해서 녹아들어 간 거지요.

○**정을호 위원** 그리고 참여연구원들 보니까 6명이 돼 있는데 이분들도 자기 소속에 따라서 전문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더라고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전문위원회가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한 거를, 전문위원들이 다시 자기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부분적으로는 들어간 게 있을 수 있지요.

○**정을호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윤석열 정부에서 그나마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의 이해상충 행위 금지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교위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셀프 연구하고 자기가 셀프 검토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그 자체는 아니고요. 지금 이 과정을 보시다시피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정책연구팀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단계를 우리 상임위원들이 다 논의했고 또 우리가 워크숍에서도……

○**정을호 위원** 그런데 의제를 제안한 분들이 그 의제를 자기가 선택하고 나중에 선택하는 것까지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그러니까 자기 논문을 자기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녹아……

○**정을호 위원** 제안사항을 자기가 하시는 거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녹아들어 가 있는 것을 검토위원 중의 하나가 돼서……

○**정을호 위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에 해당 연구

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국교위와 유사한 검토 절차를 가지고 있는 과기부 산하의 과기자문회의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기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운영세칙을 통해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제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교위에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한번 상임위원……

○**정을호 위원** 셀프 연구와 셀프 검토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그것 자체만은 아니니까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앞으로 심분 반영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산 질의인데 이게 지금……

○**정을호 위원** 나중에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조정훈 위원** 숫자가 나오긴 나오나요?

○**정을호 위원** 예, 나오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정훈 위원**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정을호 위원** 그리고 종합보고서 또 다른 사안이 하나 있어요. 이슈페이퍼 문제를 보고드리고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 연구센터 운영비로 지급된 4억 원 중 일부가 각 전문위원…… 지금 대학 산단, 사단법인을 통해 우회지급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안한 사항을 전문위원들한테 다시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2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용역을 각각 전문위원이 소속된 산단이라든가 거기다가 재위탁을 합니까? 이것 관례입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니, 그거는 교육개발원에 소속된 우리가 의뢰한 연구센터고요. 전문위원회는 별도로 돌아가는 자문기구입니다.

○**정을호 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회에 소속된 예를 들면 대학교라든가 산단에, 그분이 소속된 데다 다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분을 보고.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그거는 상임위원이 조금 설명하시지요.

○**정을호 위원** 저희가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자기가 했던 부분, 자기 용역을 자기가 소속된 어느 연구단체라든가 소속단체에 다시 가지고 와요. 자기가 그 돈을 2000만 원씩 수익을 창출한다는 게 문제인 거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그게 시스템상 개인이 가져가기는 어려운……

○**정을호 위원** 그러니까 소속된 그 단체에 보내는 거잖아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소속 대학.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소속 대학에도 보내서 그 대학이 연구자들에게……

○**정을호 위원** 그런데 왜 우회를 하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에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요새는 산학 협력하는 과정에서 수탁기관을 정해서 거기서 해서 그다음에 그걸 연구자들에게 나누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정을호 위원 앞에 이슈페이퍼 네 번째 보시면 평생·직업교육 및 교육지원 체계 의제 탐색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분한테 지금 맡겼는지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단법인 국가위기관리학회에 지정됐는데 이 법인이 뭐 하는 곳이나 봤더니 안보·재난·사회운영·재난대응 활동을 주로 하는 곳이더라고요. 교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다가 수탁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봤어요. 왜 여기다 수탁을 했나 봤더니 평생·직업교육 분과장인 이명선 교수께서 해당 학회의 7대 회장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회장 맡았던 곳에 가고 간 거지요, 수탁을.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보통 어떤 학교의 산학에다 주기도 하고요. 또 학회에다가 일단 위탁을 해서……

○정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해당 당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곳에 맡긴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잖아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위기관리학회에서 거기에 연구하시는 분들……

○정을호 위원 아니, 재난 관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곳에서 갑자기 교육을 연구한다고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아니, 그러니까 저거를 연구하시는 참여자들이 다 전문가이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국교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또 뭐냐면 나눠 먹기 식 R&D 카르텔 이 부분이 또 있어요. 보시면 국가교육위원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가지고 간 부분들에서 나눠 먹기 식, 연구위원들이 자기가 연구한 부분들을 자기 연구단체에 가져가는 그런 카르텔이라는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니, 그건 관리를 해 주는 거지. 저 교수님들 전문위원들이 하나씩 자기 해당되는 걸 쓰는 겁니다. 집필을 한……

○정을호 위원 그러니까 연구보고서를 알음알음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있는 거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니요, 나눠 먹기는 아니에요.

○정을호 위원 아니에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정을호 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분들이 지금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정책연구를 수행한 책임연구원이 검토위원회에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하고 전문위원들의 나눠 먹기 식 R&D 카르텔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에 포함된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발전계획과 관련 예산 안 보니까 10억 원 정도가 책정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이런 제도적인 방안이 개선되지 않으면 10억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교육발전계획의 신뢰성을 저해한 국교위에 대해서는 회의운영비의 한 50% 정도는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저희가 상세한 설명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전체 운영이 지금 알음알음, 짹짹 연구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분들한테 나눠 주고……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그건 아닙니다.

○정을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전혀 없고요. 그렇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호 상시 국감을 몸소 실천하시는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조정훈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문정복 간사님.

○문정복 위원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국정감사 증인 등 고발의 건, 감사원 감사 요구의 건, 교육부 감사 요구의 건 등으로 해서 의사일정변경안 추가를 요청드리고 바입니다.

○조정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오늘 합의된 일정을 어렵게 우리가 합의했는데, 법안과 예산을 상정하기로 했고 이 두 가지 합의된 일정에 대해서……

○문정복 위원 하기로 했잖아요.

○조정훈 위원 아니지요. 아니, 이렇게 합의된…… 위원장님께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그동안 한 번도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에 동의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또 필요하면 고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교육위 전체가 여야 합의로 고발도 하고 감사원 감사도 해야 앞으로 본회의까지 넘어가는 과정도 여야 합의라는 명분이 생기는데 이게 하루 이틀 증인이나 피감 대상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렇게 성급하게 이것을 의결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명단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감사원 감사요구할 기관이 있고 고발할 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추가로 제출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협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니, 협의가 저는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의사일정에 포함시켰지요. 그런데 의사일정은 지금 2개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문정복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두 간사님은 잠시 나가서 말씀 좀 하십시오. 말씀하시고,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앞으로 고발·고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청문회도 좀 가볍게 하려고 그러합니다. 청문회가 한 번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사학비리 청문회도 올 연말, 내년 격월로 한 번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발·고소도 혹시 여당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감사요청이나 고발·고소 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하여튼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김대식 위원** 예, 그건 다들 동감하는데 간사님들끼리 서로 협의하고 그다음에 협의의 토대 위에서 하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으니까 순리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정복 위원 서면동의)

(15시38분)

○**위원장 김영호** 합의가 안 된 관계로 지금 문정복 위원님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고발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교육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새로운 의사일정으로 추가해 달라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동의를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문정복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명 이상은 있고요.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문정복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문정복 위원님이 동의한 안건을 의사일정 28항부터 30항까지 각각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거지요?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록으로 남겨 두시지요.

○**조정훈 위원** 아니, 지금 누구를 고발할지 얘기도 안 해 주시고 안건이 그냥 ‘아무나 고발하겠다’입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니지요. 다……

○**문정복 위원** 아니, 국감 과정에서 저희가 고발하겠다고 얘기하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배포를 지금……

○**문정복 위원** 배포해 주시면 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행정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이것을?

○**문정복 위원** 당연히……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도 되지요?

○**위원장 김영호** 예, 하십시오.

○**정성국 위원** 기회 한번 주시지요.

○위원장 김영호 예, 의사진행발언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고소·고발하는 부분을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육위 차원에서 저는 이게 남용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감하는 부분을 먼저 우선 처리하시면서 이분을 왜 고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좀 설득도 하고 공감도 얻으면서 서로 합의가 되는 정신을 우리가 늘 강조했는데, 위원장님이 그걸 모범을 보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뭘 해야 될 급박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국가기관에 있는 분들을 고발하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저희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좀 해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명단을 일단 한번 보시고요.

상습적으로 국감을 회피한 자들 또 고의적으로 국감을 회피하고 자료제출을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수십 차례 언급을 해서 이번에는 예외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다만 정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부기관 쪽에 혹시라도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지난번 한경국립대 모 교수와 총장의 입에 담기 어려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께서도 저는 적극 공감해 주실 거라 보고요. 그 명단을 저도 지금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라는 이것은 저희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문제가 있다면 여당 위원님들께서 간사님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요. 당연히 팩트, 자료 미제출 이 부분은 예외 없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정성국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간사님께 전달해 주 보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상임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이 동의한 안건을 의사일정 28항부터 30항까지 각각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고발의 건

29.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30.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교육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15시58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28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고발의 건, 29항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30항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교육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조정훈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훈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지금 안건 28·29·30을 급하게 받아서 저희 위원들하고 급하게 상의를 했는데요. 일단 28항 국정감사 고발 대상 증인에 지금 민주당에서 여덟 분을 제안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는 동의가 되고 또 부분적으로는 고발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안은 일단은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과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교육감에 대해서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면 저희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정복 위원 저 잠시만요.

○조정훈 위원 제가 일단 의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항 국정감사 교육부 종감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아마 똑같은 이유로 임태희 교육감이 지금 교육부 감사 요청에 올라왔고 또 두 번째, 강원도특별자치교육감 신경호 교육감은 아시는 대로 얼마 전 전교조와의 충돌로 인해서 실신 상태이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육부 종합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조금, 현안질의로 진행을 해 보다가 정말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이 두 분,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신경호를 제외한 증참인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요구안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항 감사원 감사요구 건에 대해서는 5건을 제외하셨는데 또 계속 지금, 한경국립대는 동의 가능하고요. 다만 국가교육위원회의 여러 사적 이용 그다음에 4항·5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배용 위원장을 고발한 건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고민정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4항·5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진행하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수정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고발의 건은 여야 간사님께서 협의를 하신 내용이고. 감사원 감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건가요, 지금요?

○조정훈 위원 제가 3건에 대해서는 다 수정안을 했습니다.

○문정복 위원 위원장님, 고발의 건은 용어 선택을 좀 수정해야 하는데요. 지금 조정훈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제외’가 아니라 ‘보류’입니다, 2건에 대해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에 대해서는, 2건에 대해서는 보류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리고 감사의 건은?

○문정복 위원 감사는 다 진행하는 걸로.

○위원장 김영호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문정복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이배용 위원장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한 2주 정도 시간을, 1주일인가 2주일 시간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민정 위원님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국교위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위원이 요청한

것에 답변이나 실천이 사실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정훈 간사님께서 이배용 위원장님이 교육계의 원로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증인에서 제외하자는 게 아니라 보류를 하기로 저희가 논의를 했거든요. 정말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교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노력해서 다시는 이 문제가, 다시 이배용 위원장님의 존함이 언급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회적 합의기구의 본질을 잘 못 만들어 가시는지 정말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이배용 위원장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간사님과 또 여당 위원님들, 정성국 위원님도 국교위 위원님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애정 어린 말씀 주셨고요. 또 고민정 위원님께서도 국교위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있으면 이렇게까지 국정감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도 잘 감안하셔서 이배용 위원장님이 결단해 주시고 정상화 빨리 시켜 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합의를 위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쉽지 않은 부분을 우리 위원들에게도 요청을 해서, 저희도 같이 힘을 모아 볼 테니까요. 전문위원님들 이런 분들, 지금 복귀 안 하시는 분들을 야당 위원님들이 만나서 또 이배용 위원장님이 진심을 전달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사람 문제가 노력하면 또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배용 위원장님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민정 위원님 한 말씀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제가 요구드렸던 것은 중간보고안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전문위원회를 재구성했으면 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이었는데 저한테 보고가 오기로는 어떻게 왔느냐? 중간보고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정도로밖에는 저한테 보고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됐던 그 사안들에 대해서 향후 공론조사나 공청회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짜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지금까지 반대의견 있었던 것 그냥 넣은 것이 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정도 할 거였으면 국감에서 그렇게 제가 즐기치게 문제 지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회 재구성하는 부분은 이배용 위원장께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김영호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이배용 위원장님께 힘을 좀 실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이배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옆에 계시는 김태준 상임위원님 또 정대화 상임위원님들까지도 같이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관철이 되지를 앓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한테 이배용 위원장님을 한 번 더 기다려 달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배용 위원장께서 저한테 제안하셨던 그 내용들이 실제로 국교위 안에서는 관철되지 않고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정훈 간사님께서 이배용 위원

장님께 더 힘을 실어 드려서 이 전문위원회가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에 대해 물꼬를 터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배용 위원장님의 허위 증언에 대한 고발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저도 한 번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 성함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태희 교육감님 성함이 이렇게 직접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태희 증인을 이렇게 올린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급하게 명단을 봐서 다시 한번 제가 요청드리는데 민주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고발 증인 대상에서 이배용 그다음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위원장 김영호 누구요?

○조정훈 위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그리고 오승걸 한국교육평가원장이 지금 서류제출 요구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증의 경우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말을 잘못했거나 사실관계를 얘기 안 했으니깐. 그런데 두 번째 요구 불출석 그것도 이미 벌어진 거지요, 안 왔으니깐. 그런데 다른 종류의 고발 사유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입니다. 이거는 사후에라도 제출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분야가 다르다고 해서……

○위원장 김영호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자료제출은 사실 안 한 것은 팩트인데요. 결국은 고발 조치가 되면 사법의 판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자료를 제출하면 무조건 그건 감안돼서 크게 죄를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증인 문제와 자료제출 문제는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조금 냉정한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런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면 앞으로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우리 국회에서 자료제출,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저는 좋게 작용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 취지에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 굳이 위원장님과 민주당이 고발 증인을 의결하겠다고 하시면 아까……

○위원장 김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희, 이배용……

○조정훈 위원 오승걸.

○문정복 위원 오승걸은 아닙니다.

○김민전 위원 애들 시험 봐야 되잖아요.

○조정훈 위원 지금 수능인데. 아니,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기한을……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를 협상하고 그럴 문제는 아니잖아요.

○고민정 위원 그 논리로 하면 이배용 위원장의 위증은 이것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임태희 증인과 이배용 증인을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지요. 또 여야 간사님께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조정훈 위원 그렇게 하고 그건 저희가 수정안 동의하려고 하고요.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자료제출하시면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조정훈 위원 다만 29항·30항은, 위원장님 이게 지금 거의 10페이지짜리 감사요구안인데 위원들이 읽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 감사요구 건은 교육부 감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정훈 위원 이것을 바로 동의해서 의결하자고 하시면……

○위원장 김영호 몇 개의 비리 사학에 대해서 감사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 국정감사 때 잘 살펴보지 못하고 더 이상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감사요구를 해서 감사 과정 속에서 비리가 적발되면 교육부에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고 감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그 해당 학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감사요구까지는 조금 유연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취지에 동의하고요. 다만 어차피 지금 안전조정위원회가 작동할 것이고 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또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저희들이 입장을 해서 이렇게 논리 없게 깔끔하게 의결하려고 할 테니 며칠을 좀 연기해 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증인이 뭐 도망갈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인데.

○위원장 김영호 이배용 위원장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은 간사님도, 야당 간사님도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두 분으로……

○조정훈 위원 고발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호 예, 그것은 보류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의사일정 진행할게요.

○조정훈 위원 그리고 29·30항은 좀 미뤄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감사원 감사 그거는 감당하셔야 돼요.

○고민정 위원 아니, 그러면 이배용 위원장 위중에 대해서 저기하기 어렵습니다, 보류하는 것.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여야 간사님들 두 분이 시간을 갖고 합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한 부분까지만 저희가 동의를 하고 그렇게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전체 패키지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 명단을 보고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는데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했고, 읽을 시간……

○문정복 위원 아니, 그러면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조정훈 위원 그러시든지요. 그러면 저희는 거부하고 퇴장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통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며칠만 좀 보류해 달라는 건데. 이게 도망을 잡니까, 이게 출국금지가 필요한 대상입니까? 이게 다 국가기관들이잖아요.

○문정복 위원 간사님과 제가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 조정훈 위원 그래서 고발의 건은 오늘 의결하자고요. 고발의 건 의결에는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 문정복 위원 감사원 감사하고 교육부 감사 건을 빼놓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 조정훈 위원 이다음 번 안건으로 상정하자고요.
- 문정복 위원 다음번 안건은 또 다음번 안건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 조정훈 위원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문정복 위원 동의가 안 되시면……
- 조정훈 위원 동의가 안 되면 나가라는 거지요?
-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건 아니고요.
- 문정복 위원 아닙니다.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영호 여야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증인, 이배용 위원장과 임태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 간사님도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합의를 하고요.
- 조정훈 위원 고발의 건은 저희가 조정해서 했잖아요.
- 고민정 위원 아니지요, 고발의 건은 저희가 합의를 받아들인 거지요.
- 조정훈 위원 저희 고발 명단도 있어요. 그건 논의도 안 했잖아요.
-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 진선미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여당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어쨌든 감사 청구안의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구의 조정은 위원장님께 저희가 위임하고, 그러면 간사님들끼리 논의하셔서 그 부분들을 정리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감사 과정……
- 조정훈 위원 그래서 의결하는 걸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하자고요.
- 문정복 위원 그냥 진행하세요.
- 고민정 위원 국감 끝나고 나서 이것은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 조정훈 위원 그것을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명단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도 안 해 보셨지요? 저희도 고발·고소 다 있어요, 감사원 청구.
- 고민정 위원 그것은 제가 간사가 아니라서.
-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의결을 하시고 하루 이틀을 주셔서 논의해서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자, 그러면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명시적으로 이 두 분의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키로 하고 일단 의결하고요. 구체적인 문제는……
- 조정훈 위원 감사원 요구 건, 교육부 감사 건은 저희 동의할 수 없습니다.
- 문정복 위원 감사원 요구 건은 반대 표명을 하셔도 돼요.
- 김대식 위원 감사원 요구 건은 우리도 있거든요.
- 문정복 위원 다음번에 주시라고. 다음번에 넣으시라고.
-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래서 다음번에 제출하라고 그러셨어요.
- 김대식 위원 제출은 하는데 그래도 며칠만 서로가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라는 거지요. 시간을 갖고 하자는 거지.

○**문정복 위원** 이거 원래 다 나온 거예요, 지난번 국감에.

○**조정훈 위원** 오늘 아니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고민정 위원** 이미 지난번에 위원장께서 시간을 어느 정도 주셔서 오늘이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라고 그러면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어떤 이유든지 지금 저희 명단에 대한 검토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또 할 거잖아요.

○**김대식 위원** 그러면 우리 명단 무조건 오케이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정복 위원** 그렇게 협의가 된 거니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대식 위원** 내가 볼 때 이삼일 시간을 좀 주시지요.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하고 교육부 감사는 동의가 안 되시면 그냥 표결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고발 건은,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의 조정을 한 거니까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는 그대로 가시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시면 동의가 안 되시면……

○**조정훈 위원** 진짜로 왜 며칠을 더 못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정복 위원** 그냥 가시지요.

○**조정훈 위원** 그 이유가 뭐니까?

○**문정복 위원** 며칠 가도 똑같아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저는 사실 이번에만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정감사 끝나면 우리 선배 위원들은 너무나 온정주의를 다 이렇게 배워서 가지고 국회의 기강이 사실 많이 흐트러졌어요.

○**조정훈 위원** 그게 온정주의든 뭐든 다 정치적 이유가 있었겠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도 사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국민들께. 이게 무슨……

○**고민정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배용 위원장은 허위 증언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당 측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다는 걸 제가 오케이를 한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조정훈 간사님이 얘기하셨던 서류제출 요구 거절과 같은 사안이 아닙니다. 명백한 위증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받아들였는데 감사원 감사까지도 또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러면 제가 받아들인 게 뭐가 됩니까.

○**조정훈 위원** 고발을 취소하고 감사원 감사 하는 건 거의 같은 효과입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고발,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다 요구한 거지 않습니까.

○**진선미 위원** 아니, 수사 의뢰하고 감사 청구가 어떻게 같습니까?

○**조정훈 위원** 수사 중인 건 감사 못 하지요.

○**위원장 김영호** 자, 하여튼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나 감사원의 감사 청구는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 그거는 사실 어떤 불이익이 없으니까요. 아까 우리 합의한 것처럼 그 증인 문제를 저희가 수용하고……

○**조정훈 위원** 28항도 저희가 합의할게요. 29항과 30항은 연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우리 전체회의 열 때 국민의힘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하신다는 것을 제출을 일단 하세요.

○문정복 위원 김준혁 위원님이랑 지금 가서야 해서 진행을 빨리……

○조정훈 위원 가서야 되니까 28항만 해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29항과 30항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먼저 배부한 유인물에서 이배용 증인과 임태희 증인을 보류키로 하고 의사일정 28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고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장님, 교육부차관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말씀하지 마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아니……

○위원장 김영호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말씀하지 마세요, 일단.

○조정훈 위원 아니, 피고발인……

○위원장 김영호 피고발인이든 뭐든……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하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고맙습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교육부 종합감사 요구’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이 사안들의 경우에는 종합감사 성격의 사안들이라기보다는 사안 조사를 거쳐서 특정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의 대상 사안들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가지고 ‘종합감사’ 대신에 ‘특정감사’라는 용어를 써 주시면, 감사의 요구로 해 주시면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저희가 국민대학교 관련된 고발 건도요 사실 교육부의 감사 기능을 신뢰했으면, 야당 위원이 신뢰했으면 아마 감사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감사 요청해 봤자 뻔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고발하는 겁니다. 교육부가 사실 반성할 부분이 꽤 있어요. 그걸 차관님이 꼭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민신·김지용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 또는 사립학교법 등 위반을 분리하여 고발하겠습니다.

다음,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29항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거지요, 여기는?

(「예,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성국 위원님,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찡합니다.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우리 한 번 다시 논의할 시간 좀 주십시오. 아니, 저는 누구를 지키고자 하는 게 아니예요. 그래도 우리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장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장에 대한 위증은 지금 그래서 뺏잖아요. 이거는 장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감사 부분도 이걸 당장 오늘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조정훈 위원** 읽을 시간 좀 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고민정 위원** 이미 국감 내내 봤던 내용들이잖아요.

○**조정훈 위원** 그걸 우리가 봐야 알지.

○**고민정 위원** 다 들으셨잖아요. 다 들으셨던 내용들입니다.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야당 위원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지 않고요 이배용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배용 위원장님이 약속을 하실 수 있어요? 정상화시키겠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야당 위원님들한테, 사실 제가 이거는 제 직권으로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배용 위원장님이 야당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국교위는 다른 기관과 다르거든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일이 있어도 그것 다 감안해서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그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요. 제 개인의 결단으로만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구조적으로 아주 복잡한 기구예요, 이 기관이. 이런 데서 예산도 적은데 그 예산 문제보다는 구조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합의가 되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 있는데, 그러나 여하튼 합의기구로 노력은 해 봐야지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건 되지만 이거를 내가 꼭 합의로 결단을 내리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제가……

○**고민정 위원** 그러면 뭇 하러 위원장을 합니까? 위원장이 그런 것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니, 물론 위원장의 여러 가지 결단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도 있는 겁니다. 여하튼 최선의 노력은 다해 보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감사원의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감사 요청은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배용 위원장께서 본인 스스로도 어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인데 감사원이 들어가서 그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위원장이 컨트롤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지금 이 시점으로라면 위원장께서 저것 해결 못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감사원의 처방을 내려 주고 결과물을 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그것은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조정훈 위원 지금 보시면 문정복 간사님 말씀하신 게 감사요구 건의 4번이에요. 국가 교육위원회 파행 운영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그러려면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 유출에 대한 책임 규명까지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다가 안전이 유출됐는지. 이것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문건, 범위에 대해서 좀 논의할 시간을 두고……

○문정복 위원 다음번에 추가로 그것은 또 하세요.

○조정훈 위원 아니, 똑같은 감사요구 건을 또 내라고요? 그러면 국회의 권위가 뭐가 됩니까.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는 이것 오늘……

○고민정 위원 그러면 이배용 위원장 고발 건에 대해서 저 양보 못 합니다.

○조정훈 위원 오늘 이후에 세상 끝납니까?

○고민정 위원 이배용 위원장의 위증과 이 국정감사의 감사원 감사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배용 위원장에게 교육계의 원로이시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자, 그래서 그것을 백번 양보해서 그러면 위증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오히려 이게 더 명확해요.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희는 이것 참석할 수 없습니다. 표결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로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키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여당은 여당대로 그렇게 하시고요.

○조정훈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아무리 제가 물어봐도, 1주일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왜 일주일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못 하고 계세요. 1주일을 더 해서 합의해서 감사요구안을 만드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문정복 위원 제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매우 안타깝습니다.

○고민정 위원 이럴 거면 이배용, 임태희를 왜 받아들였습니까.

○백승아 위원 보류하지 마요. 다 고발하세요.

○고민정 위원 그러면 이배용, 임태희 똑같이 고발 대상에 넣으십시오. 여당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저희가 이것 양보한 것 아닙니까.

○서지영 위원 기습 상정시켜 놓고 뭐 탄소리하고 있어, 지금!

○고민정 위원 언다 반말이에요, 지금!

○서지영 위원 합의도 안 하고 기습 상정시켰잖아요, 지금!

○백승아 위원 반말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영호 자……

○김대식 위원 일주일 정도만 우리한테 좀 숙려 기간을 줘서 서로가 토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굳이 오늘 해야 됩니까.

○문정복 위원 김대식 위원님, 다 한 거예요.

○김대식 위원 안 했다 하잖아요, 지금.

○문정복 위원 매번 그래, 매번.

○위원장 김영호 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감사요구안 제안에 찬성하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전원 손 들어 주셨지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0인,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작성과 감사요구안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30항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교육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교육부는 의결로 요구한 감사 실시 사항을 면밀하게 살피고 우선 감사계획과 진행 상황을 19일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이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 것처럼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 동행명령 회피, 위증, 위원회 요구자료 미제출 등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부적절한 행태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고 제기된 불법이나 비위 등은 더 늦기 전에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 진실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법에 따른 의사일정 추가를 통해 부득이하게 안건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조정위원회는, 지금 여당 간사님이 이석을 했는데요.

○문정복 위원 제가 따로 해서……

○위원장 김영호 오늘 6시까지 위원장을 결정해서 위원장에게 말씀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오늘 의결 안건은 아니지만 교육부에 보고를 요구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결과 수감기관 등에서 드러난 문제 중에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시험제도, 시험지 보관 관련 개선 대책,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부서에서 행한 사립학원 비위 감독·처분 및 이행상황 관리 현황, 사립대학 의과계열 일반대학원 미인가학습장(강의, 대학원생, 교원, 시설현황 등) 전수조사 결과와 처분내역, 이상의 요구사항에 관하여 조치 및 처리계획을 19일 전체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서면질의는 김대식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등 7명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예산 관련 서면질의는 소위원회 심사에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11일 월요일까지 받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자료 확정과 배부를 위한 기한을 지켜 주십시오.

오늘 고발 또 감사원 요청을 마음이 무겁게 통과를 시켰는데요. 지금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이배용 위원장님 고발 건이 보류가 된 겁니다, 보류가.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힘을 모아 주시고요. 혼자 해결하지 못하시면 주위 분들, 여야 의원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님들 조력을 좀 받으셔서 정말 꼭 이 문제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8일 월요일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19일 화요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강경숙 고민정 김대식 김문수 김민전 김영호 김용태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조정훈 진선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강대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겸장관 이주호
차관 오석환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
대변인 구연희
감사관 김도완
사회정책협력관 정병익
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
정책기획관 배동인
글로벌교육기획관 하유경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학생건강정책관 이해숙
교원학부모지원관 장미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전진석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영유아지원관 박대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상임위원 김태준

상임위원 정대화

사무처장 이난영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허동현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선미

중앙교육연수원

원장 이윤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연석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한상신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사무국장 박주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송하중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이하운